

대미투자 대기업 협력사까지 美대사관에 일괄 비자신청

비자 전담 ‘KIT 데스크’ 개설…10월부터 시범운용 B-1 비자에 체류자격 등 명시…한국에만 특별 적용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을 위한 전용 비자 창구가 주한미국대사관에 공식적으로 개설됐다.

이 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단기 상용(B-1) 비자에는 한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과 수행 프로젝트 정보가 명시되고, 대기업이 협력사 인력까지 일괄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 기업인의 체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 이후 진행된 한미 비자 워킹그룹의 성

과다.

외교부는 이날 김진아 2차관이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된 한국 투자기업 전담 창구(KIT 데스크·Korean Investment and Travel Desk)를 방문해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비자 워킹그룹의 논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KIT 데스크는 대미 투자기업 전담 비자 창구로,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이날 정식으로 출범했다. 미국 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 한다.

주한미대사관에 회의 공간을 마련하고 전담 인력을 배정해 삼성, 현대차, SK, LG, 한화 등 대미 투자기업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한다.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도 데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B-1 비자 발급시 주석란에 미국 관련 규정에 따른 근로자라는 체류 자격과 어느 기업의 어떤 공장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지 정보를 명시할 수 있다.

한국에만 적용하는 특별조치로,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줄어들고 자 창구로,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되다가 이날 정식으로 출범했다. 미국 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KIT 데스크에서는 대기업이 협력사를 포함한 전체 출장 인원에 대해 일괄

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회사마다 따로 비자를 신청해야 했는데, 대기업은 주로 E-2, L, B-1 등 안전한 비자를 받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협력사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증빙 서류를 준비하기도 어렵고, 상대적으로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등 문제도 잦았는데 이런 애로점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대사관은 “KIT 데스크의 출범은 미국의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장려하겠다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아울러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직원들이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했다. 기존에 B-1 비자를 받은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하던 근로자는 즉시 B-1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 근로자가 많이 입국하는 LA, 시카고, 애틀랜타 등에서 현지 세관과 협력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은 또 B-1 비자와 ESTA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정리한 설명자료를 국·영문으로 발간하고,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과의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활동 범위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인 전용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입법 사안이라 미 행정부의 의사만으로는 되기 힘들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내 법 개정 문제는 행정부 관할을 넘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워킹그룹을 지속 개최하기로 했고,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외교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계김치연구소는 최근 한국콜마㈜와 김치 유래 유산균 자원의 연구개발 및 산업적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 유래 유산균 산업화 추진

한국콜마와 업무협약…기능성 바이오소재 산업화 기반 마련

세계김치연구소는 최근 한국콜마㈜와 김치 유래 유산균 자원의 연구개발 및 산업적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김치에 존재하는 유용 미생물과 기능성 소재 등 국가 김치미생물 자원의 산업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공동 연구와 정보 교류를 본격화한다. 연구 기반과 제조·품질관리 역량을 결합해 기능성 식품,

장내미생물 연구, 신(新)바이오소재 개발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의 확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국가 김치유래 미생물 자원의 확보와 표준화, 기능성 검증 등 기초·원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한국콜마는 축적된 화장품 연구개발(R&D) 역량과 글로벌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제품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개인맞춤형 영양과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은 K-푸드의 전통성과 K-바이오의 첨단 기술이 만나는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병석 콜마홀딩스 기술연구원장은 “김치 유래 유산균은 세계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고유의 바이오 자원”이라며 “세계김치연구소와 협력은 과학적 안전성과 기능성을 갖춘 차세대 바이오소재 기반 화장품 원료 개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해준 세계김치연구소장은 “이번 협

력은 국가가 축적해 온 김치미생물 자원의 산업 활용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김치 유래 소재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및 원·부재료에서 유래한 미생물 66종(유산균 58종, 효모 8종) 등 총 1447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치자원은행(www.wikim.re.kr/bkri)을 통해 기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균주 분양을 제공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김치음(Kimchiome)’ 활용 신바이오소재 전략개발단’ 사업을 본격 추진해 김치 유래 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산업 확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 공공건설 ‘지적분쟁’ 없앤다

LX 광주전남본부와 MOU…지적 불일치 근본적 개선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지적측량패키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사업의 정확성·신뢰성·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건설사업 추진 시 지적측량패키지 활용 △지적측량 관련 내용 자문·수행·정보 교류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적측량패키지는 △지적중첩도·지적현황 측량 △예정 지적 좌표도 작성 △드론촬영 영상영상 촬영 등을 통해 건설사업 설계 단계부터 정밀한 지적 정보를 반영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지적측량패키지를 활용하면 국내 건설사업의 구조적 요인(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작성된 부정확한 개별지적도, 한국전쟁으로 인한 지적측량자료

소실, 대지·임야 간 상이한 측량 방식의 무리한 연속 연결)으로 인한 지적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보상면적 산출의 정확도를 높이고 공사 현장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분쟁을 예방해 공사 지연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건설본부는 업무협약을 앞두고 지적측량패키지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과 지난달 두차례 ‘지적측량패키지 설명회 및 교육’을 진행했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지적측량패키지 도입은 공공건설사업에서 반복된 지적 오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공공건설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경계 분쟁을 예방해 공사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10월 경상수지 68억달러 흑자…연간 누적 최대

“반도체 수출 중심 11월부터 100억달러 이상 전망”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지난 10월 국내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8억1000만달러(약 10조447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30개월 연속 흑자 기조가 이어졌지만, 흑자 규모는 전월(134억7000만달러)과 전년 동월(94억달러)보다 각각 66억6000만달러, 25억9000만달러 축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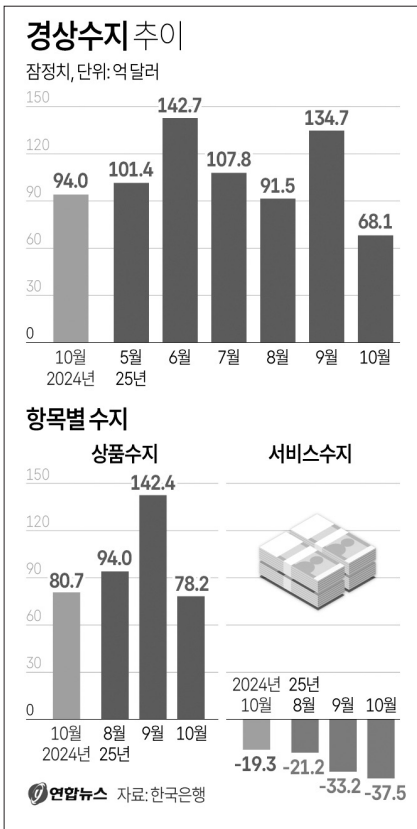
다만,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895억8000만달러)는 지난해 같은 기간(766억3000만달러)보다 약 17% 많은 상태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2000년대 들어 2019년 3월 이후 83개월 간 흑자에 이어 가장 기간 흑자 기록”이라며 “올해 1~10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치이며, 연간 기준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은 경상수지 규모가 9월보다 축소됐지만, 11월부터 명절 효과가 사라지고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상당한 무역 흑자를 보인 만큼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100억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사상 최대인 1150억달러로 예상했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78억2000만달러)가 9월(142억4000만달러)의 약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10월(80억7000만달러)보다도 적다. 수출(558억8000만달러)이 작년 같은 달보다 4.7% 감소했다. 9월(672억7000만달러)과 비교하면 감소율이 17%에 이른다.

IT(정보기술) 품목의 경우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비(非)IT 부문에서 일회성 선박 수출이 조정되고 조업 일수도 줄면서 전체 수출이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광주상의, 내달 6일 신년인사회 지역경제 위기 극복·도약 다짐

광주상공회의소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2026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건설 경기 부진과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의 확산, 환율 불안 등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모두가 하나로 결집해 침체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도약하자는 의지를 함께 모아가지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참석자 간 신년 하례를 시작으로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신년사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의 건배 제의와 덕담을 나누는 순으로 진행된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새해에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하나가 돼 당당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가 다시 한번 합치게 비상하는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참가문의는 광주상공회의소(062-350-5831~6)로 하면 된다.

송대용 기자

광주노동청, 학교 급식시설 안전·보건 현장 점검

스마트공장 고도화 해법 제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서구지역 내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방문해 환기시설 운영 상태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노동청은 급식실 내 환기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비롯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증기·분진 등 유해요인 관리 실태, 조리도구와 위생설비의 안전성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조리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작업 공정상의 위험요인, 근골격계 부담, 화상·미끄럼 사고 예방 대책 등도 점검했다.

노동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급식시설 내 환기설비 개선, 조리과정 위험성 평가 정착,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관기관과 협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일 서구지역 내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방문해 환기시설 운영 상태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해 학교 급식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조리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도영 청장은 “급식시설은 여러 근로자가 밀집해 일하는 공간으로, 환기·위생·작업환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산업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리 종사자의 안

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청은 점검 이후 현장 종사자들과 면담을 진행해 작업환경 개선 필요 사항, 애로사항, 안전보건 교육 참여 경험 등을 청취했다. 노동청은 근로자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